

[讨论稿]

## 글로벌 연금개혁의 추세

서상민(국민대)

1.

2022년 12월 7일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의 보고를 통해,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개혁의 방향으로 첫째, 재정안정성 제고, 둘째, 수급개시 연령 조정, 셋째, 기금운영수익률 제고, 다섯째,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논의를 연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본 발표는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금제도개혁이 형태를 첫째, 기금유지에 중점을 둔 개혁, 둘째, 사적 자금 활성화를 통한 공사 혼합의 하이브리드형 개혁, 구조적 개혁 등으로 크게 구분하면서 각 나라의 개혁이 갖는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2.

그 중에서도 구조적 개혁 방안을 통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과 독일 사례를 살펴보면 20%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배경과 정책을 설명하고, 이를 한국과 비교하며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복지국가모델의 사회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스웨덴은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인구변동성을 고려한 명목확정기여형(NDC)과 연금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의 복합적 구조를 갖도록 구성되어 있고, 독일의 연금개혁은 공적연금 유지와 사적연금의 국가보조금 지급이라는 하이브리드형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 3.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역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데,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나열하면, 크게, 첫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4조 1천억)를 국가재정으로 보전하고 있고, 사학연금도 2023년부터 국가재정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둘째, 국민연금 적립금이 약 900조 원이지만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2057에 기금 전액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OECD에 비해 높은 노인빈곤율(40%)로 인한 대책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 간 제시되었던 연금개혁방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운영하여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자는 주장, 둘째, 기초연금제도의 실시에 따른 ‘빈곤노인’ 문제 해소를 전제로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 셋째, 보험료를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점진적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8% 수준까지 인상하자는 주장. 넷째, 국민연금과 3대 특수 직역연금에 대한 통합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 4.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 우리나라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
3층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2층		퇴직연금(퇴직금)	직역연금
1층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0층	기초연금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 제공

#### <질문>

1. 국민연금 기금 유지를 위한 보험료 인상과 연금수급 시기 연장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연금개혁의 모수적 개혁 혹은 구조적 개혁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3. 만일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할 경우 연금을 통한 노후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독일과 같은 리스터 연금을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4. 연금개혁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